

주간 이슈 리포트

67 호

2005년 1월 둘째주(1/10 ~ 1/15)

◎ 주요내용

- 세상돋보기:	노대통령, 취임사를 다시 읽어보시오
- 노동자 세상:	김대환 장관의 현실주의
- 통신정책:	인터넷TV, 방송이나 통신이나
- 정자동 6층에서:	새해 쯤빛 전망을 넘어서
- 만화방	시사 만화



노 대통령, 취임사글 다시 읽어보시오

이기준 교육부장관의 인사 문제에 책임을 지고 청와대 인사추천회의 의장인 김우식 비서실장과 인사추천회의에 참석한 관련 수석들이 9일 전원 사표를 제출했다.

청와대와 대통령은 이번 이기준 교육부총리의 인사 문제를 깊은 반성과 뼈저린 교훈의 계기로 삼아야 마땅하다.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개혁과 참여를 내세운 노무현 정부가 이제는 아예 초심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노 대통령이 처음 정부의 장관들을 임명할 때에는 장관 후보들을 인터넷 추천을 받을 정도로 밀실 인사 배척을 약속하고 참여와 개방성을 강조하였다. 참여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번 인사는 국민들의 뜻과 여론을 거스르고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인사를 막중한 자리에 앉히려 했던 청와대의 독단이었다. 대통령을 탄핵에서 구해준 것은 이런 식으로 국민의 뜻을 거스르며 국정을 운영하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청와대는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초심을 회복해야 한다.

오마이 뉴스의 고태진 기사의 칼럼을 옮겨적이다.

이번 인사파동에 대한 소식들은 실로 충격과 실망의 연속이었다. 특히 <오마이뉴스>가 9일 보도한 것을 보면 이게 참여정부의 청와대인가 싶다.

지난 1월3일 오후 교육부총리 등에 대한 인사추천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리기 전에 민정수석 산하의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기준씨가 교육부총리가 되기에는 부적격"이라는 보고서를 올렸으나 인사추천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인사에 대한 하자여부를 검증할 책임을 지고 있는 박정규 민정수석은 무엇을 했으며, 이기준씨와 '40년 지기'라는 김우식 비서실장은 또 무엇을 했는가. 눈에 선하다. 인사추천회의장은 방심과 안이, 부실과 무원칙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러니 결과는 참담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도 방심과 안이와 무원칙에 포위돼 있었는가?

무원칙과 부실이 지배한 참담한 결과

노무현 대통령은 9일 "국민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인사시스템을 점점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비서실장과 주요 수석들의 사표 제출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말 노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충분히 시간을 갖고 깊게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하지만 분명히 해둘 것은 이번 사건에서 겉으로 드러난 것은 인사시스템이었지만 노대통령에게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했다는 점이다.

정치인 노무현은 무엇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는가? 참여정부는 어떤 역사적 책무를 부여받고 있는가? 개혁적 네티즌과 유권자들은 무엇 때문에 '소수와 노무현' '바보 노무현' '8층 후보 노무현'(민주당 후보시절 대표실이 있던 8층에서만 후보대접을 받았다는 점 때문에 얻어진 것....편집자주)을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자판기에 눈물을 쏟아부었던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노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심각하게 구한다면 이번 인사 파동은 청와대와 참여 정부에 있어 하나의 큰 위기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기회일 수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2월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렇게 밝혔다.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원칙을 바로 세워 신뢰사회를 만듭시다."

취임사에서는 또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인 정치가 구현되어야 합니다"라고 역설했다. 그래서 정권 출범 초기에는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장관을 추천하는 모습도 선보였다. 하지만 이번 이기준 교육부총리장관의 인사는 그러한 초심과는 거리가 멀었다.

취임사에 담긴 초심은 어디에 있는가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부인할지도 모르겠으나 참여정부 출범 후 2년 남짓인 오늘날 그 초심은 많이 잊혀진 듯이 보인다. 개혁과 참여를 내세웠던 참여정부가 이뤄낸, '국민을 감동시킬 만한 제대로 된 개혁'이 뭐가 있는가?

노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한때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듯 했던

국보법폐지문제는, 지난해 연말에 “천천히 차근차근 풀어가자”는 또다른 노 대통령 발언이 알려지면서 "도대체 뭘 하려는 정권인지 모르겠다"는 불신을 불러일으켰다.

정말 노대통령이 국보법 폐지 등 개혁법안에 대한 속도조절론을 이야기한 것인지, 여권의 보수파가 지극히 일반론적인 노대통령 발언을 활용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발언이 알려지면서 개혁법안의 조속하고 강력한 처리 의지는 맥이 빠졌다.

지난해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실망했던 국민들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인사파동을 접하면서 다시 한번 실망하고 있다.

그래서 노대통령은 이번에 참여정부의 초심을 되찾고 심기일전하는 일대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선 이번 인사파동의 핵심 책임자들의 사표를 수리해야 한다. 사표 반려 등으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인사추천회의 의장인 김우식 비서실장과 이기준씨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박정규 민정수석, 그리고 인사관리 업무를 담당할 정찬용 인사수석의 사표는 즉각 수리되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김우식 실장이 재계와 보수언론계에 폭넓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고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논리를 펴면서 김 실장에 미련을 두고 있지만 이번 인사파동에서 그가 보여준 '직무유기'는 그런 '장점'을 무색케 한다.

지금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스타일의 비서실장이 아닌 '참여정부의 역사적 책무를 자각하면서 정권의 초심을 지켜내는 비서실장'이 필요하다. 교체될 것으로 보이는 민정수석, 인사수석도 참여정부의 초심과 정체성에 맞는 인사들로 물갈이하여 개혁에 정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배신당한 국민들에게 개혁의 봄을

참여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부가 아니다. 개혁과 참여민주주의를 이루고자 하는 국민들이 '희망패지'를 만들고 '자발적 보좌관'이 되어 선거전략전술을 사이버상에서 교환하면서 참여정부를 만들어냈다. 또 보수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탄핵 당한 대통령을 구해낸 것도 그 국민들이다. 노대통령은 그들에게 두 번이나 엄청나게 큰 빛을 쬐 줬다.

그런데 그들이 멀리는 대북송금특검수용과 이라크파병으로 상처를 받고 최근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무산과 인사파동으로 거듭 배신감을 느꼈다. 상처받고 배신당한 그들이 영원히 등을 돌린다면 노무현 정권은 끝이다. 이번 인사파동에 대한 대통령의 공개반성과 비서실의 일괄 사의를 접하면서 그들은 "그래도 귀는 열어두고 있구나, 책임은 질 줄 아는구나"하면서 후속

인사와 향후 노정권의 개혁 행보를 지켜볼 것이다.

머지 않아 봄이 올 것이다. 국보법 폐지 논의와 개혁입법들에 대한 재논의도 다시 시작될 것이다. 향후 2,3개월 안에 봄은 왔건만 개혁의 봄이 오지 않는다면, 그래서 상처받은 전통적 지지층들이 참여정부에 대한 기대를 회복시키지 않는다면 노무현 정권의 남은 3년은 암울할 뿐이다.

핵심 지지층이 붕괴된다면, 당장 올 여름부터 권력누수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며 김우식 비서실장이 만나 '관계개선' 시켜놓았다는 재계나 보수언론계가 대신 지지자가 되어줄 것인가?

노 대통령이 그에게 2002년 12월 18일날 표를 준 국민들로부터 다시 신뢰를 얻는 길은 철저히 반성하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노대통령에게 취임사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길 권한다.

김대환 장관의 현실주의

부라퀴. 순우리말이다. '제게 이로운 일이면 영악하게 덤벼대는 사람'을 이른다. '경쟁'을 최고의 가치로 신봉해온 한국사회에서 부라퀴들은 곳곳에 튀리 튀고 있다. 모든 걸 자신의 이해관계로 판단하는 부라퀴들은 그들보다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깎아내리는 데 이골이 나있다.

문제는 부라퀴들이 한국의 역사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류'였다는 데 있다. 그래서다. 마땅히 '주류' 사회를 바꿔야 할 사람이 엉뚱하게 주류에 부닐고 있을 때, 우리의 분노는 정당하다.

어느새 '추억'이 되고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 '탄생'에서 많은 사람들은 최소한 노동정책만은 바뀌길 기대했다. 김대중 정권이 남북화해정책을 현실화한 반면에 노동배제 정책으로 일관했기에 더욱 그랬다. 하지만 노 정권의 노동정책은 갈수록 뒷걸음질치고 있다. 노동부에 김대환 장관이 취임할 때 조금은 나아지겠다는 기대도 환상임이 분명해졌다. 학술운동단체의 대표까지 거친 그는 되레 전임 장관들보다 더 굳어 있다.

학술운동단체 대표였던 장관의 '자기자랑'

<중앙일보>와 만난 김 장관은 "노동부가 2004년 정부 부처 업무 평가를 잘 받았다"며 "취임하면서 노사 양쪽에 치우치지 않는 가운데 무게중심을 잡고 균형 잡힌 정책을 펴자고 강조했고, 실제로 충실하게 지켜온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자랑했다.

노동부가 노사 사이에 균형을 잡는 부처라는 '노동부 장관'의 인식은 전임 장관의 사고와 비교하더라도 명백한 '후퇴'다. 조금 더 냉철하게 말하자. 사쪽에 편향된 경제부처들이 줄이어 있는데 노동부가 노사균형이나 무게중심 따위를 거론하는 것은 '주제넘은 발언'이다.

김 장관은 또 "노사관계는 법과 원칙의 틀을 확고히 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려고 애썼다"고 자평했다. 그가 악법을 휘두르거나 또 다른 악법을 만드는 데 '확고'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려고 애썼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그만의 착각이다. 노동현장의 누구도 장관 김대환이 대화에 "애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작 그의 문체는 노사 '균형'을 부르대면서 스스로 그걸 부정한다는 데 있다. 그는 "앞으로도 힘들겠지만 법과 원칙의 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노와 사, 특히 민주노총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장관 이전에 '사회과학자' 김대환에게 묻고 싶다. 과연 오늘 한국의 노사 관계에서 "특히" 변해야 할 게 민주노총인가, 전경련·경총인가, 정부인가. 태생 자체가 재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중앙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그가 언죽번죽 '현실주의'를 거론하는 것은 가장 역겹다.

그는 청와대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과 갈등을 우려하는 질문에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참모는 이상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장관은 현실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정우 위원장이 얼마나 이상을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김대환 장관의 현실주의에는 현실이 전혀 없다. "정규직은 선(善)이고, 비정규직은 악(惡)이라는 식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접근하면 안 된다"는 김 장관의 현실론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살한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의 현실론을 단호히 '부라퀴 현실주의'로 비판하는 까닭이다.

'부라퀴 현실주의'에는 현실이 없다

김 장관이 '기특'해서일까. 부자신문 <중앙일보>는 사설 '민노총, 분규 없는 한해 만들게 협조해야'(1월5일)에서 김 장관의 말을 '엄호'하고 나섰다. 심지어 사설은 현대중공업 노조가 "아예 민주노총에서 빠져나와 버렸다"며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과격한 노동운동은 더 이상 설 땅이 없게 됐다"고 주장한다.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비정규직 자살'을 모르쇠 한 이유로 제명 당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정반대로 뒤틀며 민주노총을 '사냥'하는 부자신문의 부라퀴들과 함께 불러대는 노동부 장관 김대환의 목 쉰 '합창'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그 노래가 노동자들을 저주하는 '장송곡'으로 들리는 것은 과연 필자 만일까.

손석춘<한겨레 논설위원>



인터넷 TV, 방송 이냐 통신 이냐

인터넷을 통해 각종 동영상 콘텐츠를 TV로 제공하는 IPTV는 통신 서비스인가, 방송 서비스인가. 사업자들이 2005년 하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인 IPTV 서비스를 놓고 통신업계와 방송업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자 급기야 국무조정실이 조율에 나선 상태이다.

지난해 5월 서울과 일부 수도권에서 홈네트워크 서비스 "홈엔"을 상용화하면서 IPTV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는 KT와 관련업계들의 통신·방송 융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 방송법이란 규제에 관한 견해를 한국경제 기사를 통해 알아본다.

국무조정실은 7일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와 연구소 및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비 공개 토론회를 가졌다.

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는 "IPTV는 통신기술 발전으로 생겨난 부가통신 서비스로 방송법에 규정된 방송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반면 방송위원회와 방송업계는 "케이블TV와 비슷한 방송 서비스인 만큼 방송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양측은 의견차를 전혀 좁히지 못했다.

IPTV가 논란이 된 것은 방송위원회가 최근 이 서비스에 대해 "본질적으로 디지털TV 방송이므로 방송법에 따른 규제가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방송법 개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IPTV가 "방송"이라면 통신사업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영되는 영상물에 대해 방송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IPTV 서비스를 추진해온 KT 하나로텔레콤 등 통신사업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통신.방송 융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마당에 방송법이라는 틀로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정통부 역시 IPTV를 "방송"으로 분류해 규제하면 기술발전을 저해한다며 통신업계를 두둔하고 있다.

통신업체들의 IPTV 서비스는 이미 상당히 진척됐다.

KT의 경우 지난해 5월 서울과 일부 수도권에서 홈네트워크 서비스 "홈엔"을 상용화하면서 IPTV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는 원하는 시간에 영화 드라마 교육 등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해서 시청하는 VOD(주문형비디오)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하나로텔레콤도 올해 하반기 중 상용 서비스를 목표로 IPTV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로텔레콤은 VOD 형태의 서비스는 물론 동영상 콘텐츠를 인터넷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유사방송 서비스"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는 현행 방송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자에 의한 인터넷방송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지만 통신사업자에 의한 인터넷방송에 대해서는 규제 권한이 없다.

유선방송업체 관계자는 "인터넷을 이용하던 전파를 이용하던 TV를 통해 동영상을 제공하는 것은 똑같다"며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한쪽은 규제를 받고 다른 쪽은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통신.방송의 융합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IPTV가 통신인지 방송인지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한다.

산업 전체적인 측면에서 IPTV의 효과적인 수용방안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국진 박사는 "기술 흐름상 앞으로 통신사업자가 통신. 인터넷.방송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새해 잿빛 전망을 넘어서

2005년 새해가 밝았다. 모두가 진저리친 한 해를 넘긴데 대해 홀가분한 표정들이고 '닭의 해'에 거는 기대도 많은 듯하다. 닭은 다산(多産)·풍요·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한다. 닭의 울음은 한밤의 어둠과 적막을 깨고 밝음과 활기에 찬 새벽, 아침을 불러오고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이기게 하는 희망의 소리가 들어 있다고 한다. 십이간지 모두가 덕담으로 가득하지만 닭띠의 그것은 우울하기 그지 없었던 작금의 상황에 견주어 잘 맞아 떨어지는 듯하다. 지난 해의 어두움을 떨치고 올해는 새 빛으로 다가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는 광복 이후 다시 60갑자를 시작하는 해, 무엇인가 변화와 도약의 기대가 한껏 높아질만한 해이기도 하다.

비관적 예측을 빗나가게 하기 위한 조건들

세밑 지는 해에 지난 날의 어두움을 모두 실어 보내고 동해에 불끈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활기에 충만한 세상을 소망하지만 상황은 그다지 밝지가 않다. 무엇보다 지난해 끝머리 어설픈 정치적 결말이 우울증을 더해준다. 살을 에는 한겨울 칼바람 속 1,400명의 목숨을 건 절규에도 국가보안법 철폐나 과거사진상규명, 사학개혁 등은 좌절되고 말았고 추악한 이라크 파병 연장안은 통과되었다. 수구냉전세력 한나라당의 오만함과 욕심에 종이호랑이 열린 우리당의 무기력이 겹친 결과지만 이를 빌미로 기득권세력의 발호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을 생각하면 역겨움만 더할 뿐이다. 나라살림 역시 우울하게 한다.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로 4년 넘은 불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것이고 일자리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사회양극화의 참상이 경제규모 10대국의 밑바닥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여기다 북한 핵을 둘러싼 분위기도 심난하고 남북관계는 여전히 불안한 안개속이다.

노사관계도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는 듯하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를 통해 경기침체의 위기를 모면하려 할 것이라는 점이 가장 큰 위협이다. 이렇게 되면 임금정체는 물론, 고용불안이 증대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커지면서 노사관계는 더욱 날카롭고 복잡하게 될 것이다. 여기다 노사정 사이에 갈등을 부추길 제도 정책과 관련된 미결의 과제들이 지뢰밭처럼 널려 있다.

그러나 세상 일이란 양면성을 지니면서 변화하기 마련이다. 더욱이 노사관계는 환경의 변화

와 그 주체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환경 요소의 하나는 곳곳에 늘어붙어 있는 비민주적 요소들을 청산하는 일이다. 국가보안법 철폐, 과거사진상규명법 제정, 재벌개혁, 언론 개혁 등이 그 예이다.

이들은 모두가 반공 냉전주의에서부터 권위주의 개발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배권력과 독점자본이 결탁하여 만든 산물로서 노동운동 발전을 저해하고 노사관계 변화를 가로막은 중요한 요소들이었다.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의 의회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제도와 정책 개선을 둘러싼 마찰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노동자들에 대한 구속과 대량 징계를 해제 또는 완화하는 것도 노사관계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관계 악화 전망의 중요한 근거가 경제문제라면 기업의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어차피 경제활성화의 주역은 기업이기 때문이다. “기업이 국가”이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를 기회있을 때마다 주창하는 정부 아래에서 정부와 노동조합 때문에 기업하기 힘들다는 주장은 어떤 설득력도 지닐 수가 없다. 전체의 2%도 안되는 지분을 갖고 수조 원의 재벌기업 수 십개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면서 경영구조 개혁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로는 기업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을 해소할 수 없을 것이다. 노동의 질은 외면하고 오로지 비용에만 매달리는 노동유연화 추구하고 잔뜩 날을 세워 노동을 왜곡 공격하는데만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노동을 끌어안고 호소하는 모습으로 바꾸는 것도 노동의 신뢰를 이끌어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 노동조합의 양보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한 납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스스로 제시하고 노동조합을 기업 발전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대한다면 노사관계의 지형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노사관계는 ‘자치’가 기본원칙이지만 그것이 정부 역할의 축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의 초점은 시장경제의 실패로부터 나타나는 시장경제의 소외자, 곧 사회적 약자 보호에 있다.

이미 참여정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사회적 안전망을 파괴하는 것에 주목하여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목표로 내건바 있다. 그러나 그 경과는 미진한 것이었고 삶의 한계선상으로 밀리는 소외자는 확대일로다. 그 중심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전체 노동자의 56%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문제가 가로놓여 있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는 설 땅이 없고 노사관계 안정은 기약하기 어렵다. 정부는 그 해법의 하나로 일자리 만들기에 온 힘을 쏟는 모양이지만 양만을 중시하는 일자리 만들기가 고용불안을 확대하거나 사회 양극화를 부채질해 궁극적으로는 경제 기반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또 하나의 요건은 노동기본권 보장이다. 이것은 자본이나 정부 일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노동의 유연화와 맞바꿀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인권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역대 정권의 한결같은 약속이었고 국제사회의 일관된 요구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동기본권 보장은 다른 사안에 앞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은 선진사회 진입의 상징이기도 하다.

폭넓은 연대, 사회정의 실현이 노동운동의 책무

우리 사회에서 노동운동에 거는 기대는 너무도 크다. 노동운동이야말로 말로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 참된 민주주의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운동은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고 자칫 그 바탕마저 위태로울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노동운동이 조합원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시급히 전체 노동자 대중의 관점으로 전환해 나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이미 노동운동은 지난해 노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험을 시작했고 비록 부분적인 성과이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사회공공성 확대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와 실천적 합의 도출, 산별교섭의 진전과 산별노조 건설운동의 재점화, 양대노총의 연대 확장, 현장토론 복구 노력 등등이 그것이다.

앞으로 노동운동의 활성화 여부는 스스로를 혁신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얼마나 확대 재생산해내는가에 달려 있다. 바로 조합원의 좁은 이해를 넘고 기업내 교섭의 틀을 뛰어 넘어 사회적 교섭의 장으로 확장시켜 사회개혁투쟁을 얼마나 치열하게 전개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것은 노동운동을 지금까지와 같은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처지에서 벗어나 당당하고 의연하며 정의로운 투쟁의 주체로 다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노사관계의 변화와 개혁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원보<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만

화

방

